

안 터지는 휴대전화...속 터지는 시민

광주 KT 사용자 잦은 끊김·통화 불가·잡음 등 불편 호소 잇따라
KT “기기 문제”·제조사 “5G망 신규 설치 탓”...책임 떠넘기기만

#1. KT 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회사원 박모(47·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들어 광주 도심 곳곳에서 휴대전화 통화중 끊김 현상, 통화불가, 통화 중 잡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직업 특성상 통화량이 많은 박씨는 지속된 통화 장애로 KT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끊김 현상 등은 여전하다.

2년 전 삼성전자가 갤럭시S8을 구입해 이 용중이라는 박씨는 “KT에선 불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인 끊김 현상 등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휴대전화 문제일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았더니, 최근 KT 이용고객의 통화불량 민원이 부쩍 늘었는데, (KT가) 5G망을 기존 4G에 덧씌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요즘 말썽한 휴대전화 교체 고민 중이다.

#2. 간호사 김모(24·광주시 서구)씨도 최근 구매한 지 1년 밖에 안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꿨다.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휴대전화를 교체한 까닭은 지속된 통화불량 때문이었다. 김씨는 “통화불량 문제를 주변에 말하자 지인들이 LTE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통화불량 현상이 발생한다면 5G 휴대폰으로 교체를 권했다”며 “간혹 사다 보니 서비스센터와 KT 통신사를 방문할 여건이 안돼 휴대전화 교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KT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전화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고객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결국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술며 겨자 먹기’로 말썽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마저 겪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KT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 통화 품질 저

하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를 놓고 KT는 휴대전화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KT가 기존 4G망에 5G망을 신규 설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요즘 신형 휴대전화엔 내부 블랙박스도 있어 통신불량 등의 이유가 다 기록된다”면서 통화불량 사유 등이 기록된 휴대전화 내부 데이터를 공개했다.

반면 KT측은 휴대전화 기기 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통화품질 불량을 호소한다는 이용자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LTE 사용자가 5G 사용자에게 비해 많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그런 피해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KT측은 다만 광주에서 진행중인 5G기지국 설치 및 가입자 수 등에 대해선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통화품질불량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는 “최근 확장중인 5G기지국 확충사업이 LTE사용자의 전화망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LTE통신장비에 5G를 덧씌워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KT 이용자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4월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LTE 속도 저하 현상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속도 저하 원인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5G 신호를 잡을 수 있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5G 신호 처리는 통신장비 한 대 안에 LTE 신호 처리장치와 5G 신호 처리 장치를 함께 두는 구조다. 일종의 컴퓨터인 통신 장비를 작동시키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통신장비 제조사에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난 뒤 LTE 장비로 보내야 할 신호를 5G 장비로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KT는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된 뒤 LTE 속도가 정상화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5G와 관련한 고객들의 민원 접수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분석 등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5G망 구축 이후 휴대전화 통화품질 저하 민원 등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연말 내로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검 “스쿨존 사망·중상해 땀 구속 수사”

일선 검찰청에 지시

대검찰청이 스쿨존 내 사망 및 중상해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시 구속 수사

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 시 사고원인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

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스쿨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도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정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준은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중요소의 수에 따라 무겁게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 어구 사용·만취 운항 선장 잇따라 적발

여수해경 “강도 높은 단속 계속”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6일 지난 24일 밤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근해선망 K호(10t, 여수산적) 선장 A(56)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근해선망 K호는 여수시 금오도 서쪽 해상에서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 멸치 100여 kg을 포획한 혐의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멸종위기종 멸치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1시간 30여분간 선박을 운항 한 D호(4.99t, 승선원 6명, 여수산적) 선장 B(49)씨를 수상 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승려 행세 하며 술집서 상습 행패 50대 입건

화순경찰은 26일 승려 행세를 하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A(53)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경 화순군 화순읍 일대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승복을 입은 채 승려 행세를 하고 다니며 주점에 들어가 시주 명목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제가 정확치 않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광주시청사 방호시스템 재검토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입한 광주시청사 방호시스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청사내부는 기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15일 방호시스템을 도입,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해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오른쪽)



광주시청사 방호시스템 재검토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입한 광주시청사 방호시스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청사내부는 기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15일 방호시스템을 도입,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해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오른쪽)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

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

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

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방인은 ‘사망의 종류’가 아닌 사인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 측은 화해권고에 불복하면서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